

제2차 북핵 위기 이후 북중관계의 근본적 변화 여부에

관한 연구

- 경제/군사안보 영역의 최근 변화를 중심으로 -

김재관*

- I. 머리말
- II. 중국의 대국책임외교와 대북정책의 변화
- III. 중국의 대북전략과 정책의 기초
- IV. 경제안보 영역에서의 북중관계의 변화여부
 - 북중경제협력의 강화와 그 해석의 모순성 -
- V. 군사안보영역에서의 북중관계
 - 북한 핵개발에 따른 북중관계의 변화 여부 -
- VI. 맺음말

이 글은 2003년 제2차 북핵위기와 북한 핵개발 이후 북중관계의 변화를 경제안보 영역과 군사안보 영역으로 나눠 어떤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탐구하고 있다. 비록 최근 두 나라 사이에 경제안보와 군사안보 차원에서 갈등과 문제점들이 노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본 글은 기본적으로 북중관계는 이 두 영역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아직까지 초래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동시에 이 글은 북한이 비록 2003년 이래로 특히 북한 핵위기 이후 북한이 중국에게 전략적 부담으로 여겨졌을지라도, 북중관계는 확고하게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해왔다고 강조한다. 이런 논증은 일련의 논거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으며, 논리적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의 최우선적 정책은 북한체제의 생존으로서 그 최중적 핵심은 바로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북한은 북한에 대해 치명적인 제재를 가하지 않았고, 오히려 각종 경제적 지원조치를 통해 북한체제가

* 전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생존할 수 있도록 도왔던 것이다. 둘째, 중국은 북한에 대한 전략적 가치에 있어 '전략적 부담론'보다는 '전략적 완충지대론'에 큰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중국은 북한의 갑작스런 붕괴를 원치 않기 때문에 최소한 중국이 남북 양국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한에서 두 개의 한국이란 '현상유지' 정책을 선호하고 있는 점이 확실하게 보인다는 점이다. 넷째, 중국은 여전히 1961년에 북중 양국이 맺은 소위 "북중 우호합작상호원조조약"을 하나의 동맹조약으로서 공식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점이다. 다섯째, 최근 중국 내 북한문제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중국이 비록 공식적으로는 북한의 비핵화를 주장하지만, 실제로 북한의 핵실험 이후 북한을 핵보유국가로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라는 여론이 부상하고 있는 점이다.

주제어: 북중관계, 북한 핵위기, 완충지대론, 전략적 부담론, 중국위협론, 중국기회론

I. 머리말

2006년 10월 9일 북한 핵실험의 감행은 전세계를 놀라게 했다. 핵실험은 2005년 9.19 공동성명에서 밝힌 6자회담의 결실이 수포로 돌아가게 한 사건이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북중 간에 심각한 균열 조짐이 가시화되고 있지 않는가라는 의구심을 불러일으켰다. 주지하다시피 북한 핵실험 직후 중국정부는 외교부 성명을 통해 “북한이 국제사회 전반의 반대를 무릅쓰고 ‘제멋대로’(悍然) 핵실험을 강행했다”식의 강경어조로 북한을 통렬히 비판한 바 있다.¹⁾ 일반적으로 중국의 외교적 언사 가운데 소위 ‘한란’(悍然)이란 표현은 적대국

1) “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声明,” 2006년 10월 9일, <http://www.fmprc.gov.cn/chn/zxxx/t275346.htm>(검색일: 2006년 10월 16일)

을 겨냥해서 사용하는 용어라는 점에서, 중국 정부가 얼마나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분노했는지를 단적으로 시사한다.

사실 최근 북중관계 균열의 직접적 계기는 핵실험 이전인 2006년 4월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에 중국이 동참하면서 가시화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은 전통적 혈맹국가로서 신뢰해마지 않았던 중국의 친미적 대북정책에 대해 분노를 금치 못했고, 이에 따라 북한 내부의 대중(對中) 불만과 위기감은 고조될 수밖에 없었다. 북중간의 불신이 증폭되고 있던 가운데 북한이 2006년 7월 5일 7발의 미사일 발사실험을 재차 시도하자 중국은 급기야 UN 안보리의 대북제재안에 찬성표를 던지게 되었다. 이처럼 북중간에 상호불신이 심화되고 있는 와중에 설상가상으로 10월 9일 북한의 핵실험 강행은 한편으로 중국으로 하여금 격렬한 분노를 자아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 중국의 대북 억지력에도 상당한 한계가 있음을 역설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었다. 게다가 핵실험 개시 2시간 전에 러시아에 먼저 통보한 것과 대조적으로 중국측에는 불과 20분전에 통보함으로써 중국측의 분노를 한층 더 고조시켰다. 이런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북한 핵실험은 최근 북중관계를 심각한 위기상황으로 내몬 최악의 계기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 과연 핵실험을 전후로 하여 전통적 우방국가였던 북중관계는 불신과 균열이 계속 심화될 것인가? 아니면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안정적 기반 위에서 계속 강화될 것인가? 최근 북중균열의 기원을 좀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2003년 제2차 북핵위기 발발 이후라 할 수 있다. 이 시기를 기점으로 북중관계에 이상 기류가 서서히 조성되어 왔다. 비록 2000년 이후 양국 간에 경제적 차원의 협력도 증대되어왔지만 동시에 군사안보 차원에서는 오히려 갈등이 더 크게 부각되어 왔다. 그리하여 중국 내 대북관도 종래의 '완충지대론'(buffer zone school)보다 북한에 대한 '부담론'(the liability school)에 더 무게중심

이 실리고 있는 상황이 되었다. 이런 정황을 반영하여 북중관계도 앤드류 스코벨(Andrew Scobell) 교수의 표현처럼 종래의 순망치한(唇亡齒寒)적 '동지적' 관계로부터 소원한 동맹관계(From Comrades-in-arms to Allies at arm's length)로 전환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 바 있다.²⁾ 이러한 '북한부담론'은 한편으로 중국의 대북 견제나 영향력 행사에서 일정 정도 한계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 북중관계보다 안정적인 미중관계를 더 중시하는 중국의 실리주의적 외교전략이 중국 학계와 지도부 내부에서 더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음을 반증한다 하겠다.

그러나 제2차 북핵개발을 둘러싸고 마찰을 빚어왔던 북중관계가 최근 들어 상호불신이 더 깊어지고 있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기본적으로 북중관계는 안정적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왜냐하면 핵개발이나 핵실험은 북중관계의 토대를 와해시킬 수 있을 만큼 결정적 요인이 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북중관계의 중요성은 핵실험에 의해 결정적으로 영향받지 않는다는 점이다.

또한 최근 경제안보 차원에서 북중관계의 변화를 둘러싸고 국내에 한 주류 담론으로 거론되는 소위 북한의 중국 '동북사성화론'(東北四省化論) 혹은 '위성국가론'이 국내 일부 국수적 민족주의 세력에 의해 유포되고 있지만, 그 근거는 대단히 희박하며 한국판 '중국 위협론'으로 악용될 소지도 없지 않다. 즉 북중경제협력강화→위성국가론→중국위협론으로 추론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요 일반화

2) You Ji, "Understanding China's North Korea Policy," China Brief, Volume IV, Issue 5, March 3 2004; International Crisis Group, "China and North Korea: Comrades forever?" International Crisis Group Asia Report No. 112 - 1 Feb 2006, p. 13; Andrew Scobell, "China and North Korea: From Comrades-in-arms to Allies at arm's length," Strategic Studies Institute of the U.S. Army War College, March 2004, <http://www.strategicstudiesinstitute.army.mil/pubs/display.cfm?pubID=373>

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 오히려 북중경제협력강화→동반성장론→
'중국기회론'으로 해석하는 것이 좀 더 북중관계의 객관적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이상의 주장들을 논증하기 위해 필자는 우선 중국의 동북
아외교전략의 큰 틀 속에서 북중관계의 변화 여부를 경제안보 차원
과 군사안보의 차원으로 나눠 분석하고자 한다. 중국의 대북외교전
략과 정책은 기본적으로 중국의 동북아 전략의 일환임은 주지의 사
실이다. 그리고 중국의 '대국책임외교'(负责任的大国外交)를 독립
변수라 했을 때, 대북전략과 정책은 하나의 하위 범주로서 종속변수
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중국의 대국화 전략과 동북아
전략의 특징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미중관계
를 기조로 하여 북중관계를 볼 때 동북아 다자간 역학관계의 모순
적인 중층적 구조를 한층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논
의를 기초로 경제안보 차원과 군사안보 차원에서 북중관계의 균열
이 심화되고 있는지 아니면 안정적 관계를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논증을 시도하고자 한다.

그리고 본 논증을 위해 본론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북중관계의
균열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로서 몇 가지 바로미터를 제시할
것이다. 이를 통해 북중관계의 근본적 변화 여부에 대한 추론이 이
루어질 것이다. 본 연구는 북중관계를 둘러싼 최근 국내외의 논의자
료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II. 중국의 대국책임외교와 대북정책의 변화

1. 중국의 대국책임외교의 양면성과 그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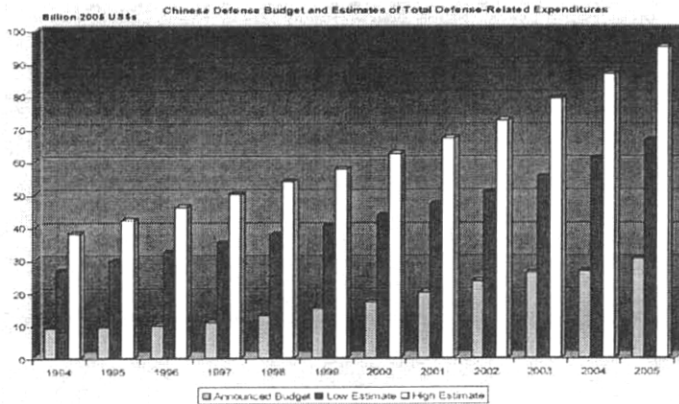
21세기는 '중국의 시대'(Pax Sinica)가 도래할 것이라는 예상이 전세계에 확산되고 있다. 그 '팍스 시니카'의 도래 가능성은 중국의 종합국력(Comprehensive National Power: CNP)을 나타내는 여러 구체적인 통계수치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 가령 하드파워(경성권력) 가운데 특히 중요한 경제력과 군사력 측면에서 보면 놀라운 성장을 이미 이룩한 상태이다. 경제력 가운데 무역총량의 경우 2004년 8월 이후 세계 3위권으로 진입해 일본을 추월했으며, 2006년 말에는 1조 7607억 달러로서 세계 3위 자리를 확고히 했다. GDP 역시 2005년말 2조 2천 6백억달러로서 세계 4위권에 진입했다. 이 GDP를 구매력 평가지수(PPP)로 환산할 경우 이미 중국의 2004년 GDP는 7조 5070억 달러로 일본을 추월하여 세계 2위에 해당한다.³⁾ 그리고 외환보유고 역시 2006년 10월말 현재 1조달러를 돌파하여 세계 1위를 차지했으며, 외국인 직접투자(FDI) 역시 2005년 실제 이용액은 603억 달러에 달해 세계 1위를 차지한 상태이다. 한편 경성권력 가운데 중요한 부분인 군사력의 신장 역시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다. 단적으로 미국 국방부 <2006년 중국 군사력 보고서>(The Military Power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06)에서 2006년 중국의 실질 방위비가 중국 공식 발표액보다 2~3배 더 많은 약 700~1050억 달러로서 이미 세계 2위 군사강국으로 부상했다고 경고하고 있다.⁴⁾ 이 수

3) Central Intelligence Agency, The World Factbook 2005, updated March 29, 2006, <http://www.cia.gov/cia/publications/factbook/rankorder/2001rank.html> (April 11, 2006)

4) Office of the Secretary of Defense, "Annual Report to Congress: The Military Power

치는 의도적으로 축소보도를 하는 중국정부의 공식통계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대조를 이루고 있다. 중국정부의 공식 방위비 수치는 2004년에 255억 달러, 2005년 299억 달러, 2006년 350억 달러로 증액되어왔다고 한다. 아래 도표 1은 중국정부의 공식발표와 미국의 예상수치 간의 상호 격차를 나타내는 것이다.

〈도표 1〉 중국의 전체 방위관련 국방예산증가표 (단위: 10억 달러)



출처: Office of the Secretary of Defense, 2006, "Annual Report to Congress: The Military Power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06," <http://www.dod.mil/pubs/pdfs/China%20Report%202006.pdf>, p. 19. 막대 그래프 3개(1쌍)의 병렬순서별로 맨 왼쪽은 중국정부의 공식수치; 중간은 미국방부의 저평가 예상수치, 맨 오른쪽은 고평가 예상수치임.

이상과 같은 하드파워의 신장을 바탕으로 중국은 또한 소프트파워(연성권력)의 확산에도 상당히 집중하고 있는 바, 특히 21세기에 접어들면서 국제사회에 '책임을 지는 대국외교'(负责任的大国外交)와 평화적 이미지를 부각시키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06," (<http://www.dod.mil/pubs/pdfs/China%20Report%202006.pdf>), p. 20.

‘대국책임외교’, ‘다자간 지역주의 외교’, ‘양자외교로서 주변국과의 선린외교’, ‘다국화 외교’ 등을 추진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2003년 후진타오 국가주석이 집권한 이후로 연성권력에 기초한 글로벌 대국외교전략이 강화되고 있다. 우선 2003년부터 중국의 부상이 위협적 부상이 아니라 ‘평화적으로 부상’한다는 소위 ‘평화부상론’(和平崛起论)을 제창한 점이 주목된다. 중국의 평화적 부상이 ‘중국위협론’이 아니라 오히려 ‘중국기회론’을 확산시키고 국제사회에서 ‘평화와 발전’(和平与发展)을 증진시킬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하여 2004년에 중국은 평화부상론 마저도 중국위협론을 확산시킬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아예 ‘부상’이란 용어를 삭제하고 대신 ‘평화발전의 노선’(和平发展道路)을 주창했다. 이어 2005년에는 ‘조화로운 세계’(和谐世界: harmonious world)란 새로운 외교이념(조화외교)을 표방하면서 중국의 평화추구적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선전해왔다.⁵⁾ 요컨대 후진타오 시기 중국 책임대국외교의 특징은 ‘三和’(和平崛起, 和平发展, 和谐世界) 외교노선으로 집약할 수 있겠다.

그러나 이런 연성권력에 기초한 외교적 수사와 실재를 구분할 필요도 있다. 왜냐하면 중국이 21세기 이후 글로벌 대국으로 부상하면서 중화민족주의를 부활시키면서 주변국가들의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 가령 2006년에 나온 하와이 대학 <동서센터: The East-West Center>의 “아태지역 안보 연구보고서”(Asia Pacific Security Survey, 2006)는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즉 동 보고서의 설문 조사에 따르면, 아태지역 내 단·장기적으로

5) 王义桅, “从和平崛起到和谐世界: 胡锦涛外交战略的变迁-兼谈中美如何和谐相处?,” 2005년 12월, 현대중국학회 발표논문; 国务院新闻办公室, 2005, “中国的和平发展道路,” http://www.gov.cn/jzgk/2005-06/02/content_3618.htm(검색일: 2006년 6월 30일)

나는 가장 중요한 안보불안의 1순위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개발(단기)과 중국의 중화민족주의(장기)를 각각 꼽고 있다.⁶⁾ 그리고 중국이 하드파워 중 국방현대화에 매진하는 측면도 주변국가들과 미국의 우려를 낳고 있다. 중국은 특히 대미전략의 일환으로 국방현대화와 신안보전략의 추진, 즉 '정보화 조건하에서의 제한적 국방부전'을 수행할 수 있는 '군사분야혁신'(RMA)과 '초한전'(超限战: Unrestricted Warfare)을 추진함으로써 '공세 현실주의'(offensive realism)와 '수세 현실주의'(defensive realism) 정책을 동시에 구사하고 있다(Office of the Secretary of Defense 2006, 7; 20-21).⁷⁾

뿐만 아니라 중국 내 호전적인 대미 '응수전략'(tit-for-tat strategy)이 대두되어 동북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측면도 없지 않다. 가령 2005년 7월 중국 인민해방군 소장 겸 국방대학 학장인 주청후(朱成虎) 장군은 중국이 대만과 대치 중에 미국의 공격을 받으면 미국에 대해 핵 공격을 감행하겠다는 발언을 하여 미국으로부터 비상한 관심과 우려를 낳은 바 있다. 이 발언은 비록 개인적 소견의 형식으로 표현된 것이긴 하지만 중국의 기존 '핵선제불사용'(no-first-use: NFU) 정책과도 위배되는 발언이어서 주목을 받은 바 있다.⁸⁾

한편 2005년 3월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는 '반국가분열법'을 통과시킴으로써 대만의 독립화 시도를 결코 묵과하지 않겠다는 중국의 강경대응방침을 거듭 천명하기도 했다. 즉 대만이 독립을 위해 헌법개정, 국민투표 실시, 국기·국명변경 등으로 일방적 독립선언을 한다거나 외국세력이 대만을 침공·점령 또는 대만에 군대를

6) Richard W. Baker, "Asia Pacific Security Survey 2006," East-West Center, <http://www.eastwestcenter.org/stored/pdfs/APSS2006Report.pdf>, 2006, p. 8

7) 乔良, 王湘穗, 『超限战: Unrestricted Warfare』(北京: 中国社会科学出版社, 2005).

8) 최근 NFU 정책 폐기 여부를 둘러싸고 중국 내 학자들 사이에서 논쟁이 일고 있다 (Office of the Secretary of Defense 2006, 28).

주둔시킬 경우라든가 혹은 대만에 정치, 경제, 사회적 격변 등이 발생 하였을 시에 국무원과 중앙군사위원회가 먼저 군사적 조치를 취하고 사후에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에 보고 추인받는 일종의 ‘先조치 後추인’ 방식의 속전속결식 강경대응책이다.⁹⁾ 이처럼 2005년 중반기 이후 미·중 간의 ‘안보 딜레마’(security dilemma)가 한층 더 가중되면서 중국 내 호전적인 강경대응론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 또한 중국이 ‘평화적 부상’을 통한 대국화 시도와 국제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기도가 점점 강화되고 있는 점도 우리의 주목을 끌기에 충분하다.

요컨대 중국의 대국책임외교는 미국의 패권주의에 대한 하나의 대응전략으로 급부상하고 있는데, 동아시아 지역에 국한시켜 그 특징을 보면 크게 몇 가지로 집약된다. 첫째, 중국은 동북아 지역의 안정과 평화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대국책임외교를 구사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후(胡)-원(溫) 신지도부는 집권하자마자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새로운 외교정책을 제기한 바 있다. 즉 기존의 독립자주 평화 외교노선을 견지하면서도 제 16차 전당대회에서 “与邻友善、以邻为伴”제기했고(江泽民/2002/11/8),¹⁰⁾ 이어 2003년 원자바오(温家宝) 총리는 이 원칙을 보다 구체화해 “睦邻”、“安邻”、“富邻” 원칙, 즉 중국이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를 한층 더 화목하고 안정적이며 공동번영하겠다는 발전적 외교정책을 새롭게 제시하기도 했다(温家宝, 2003/10/7; 萨本望, 2004, 12). 후진타오 체제의 신외교정책은 결국 공세적인 미국의 패권주의와 일방주의와 대립되는 ‘중국의 평화적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가운데 일종의 선린외교를 한층 더 강

9) ‘반국가분열법’의 全文 (http://news.xinhuanet.com/newscenter/2005-03/14/content_2694168.htm)

10) 与邻友善은 주변국가들과의 우의와 친선도모를, 以邻为伴은 주변국가를 동반자로 삼는다는 뜻임.

조하고 있다. 둘째, 중국은 경성권력과 연성권력을 결합병행시키는 외교전략을 구사하고 있다.¹¹⁾ 최근 들어 연성권력을 대대적으로 강조하는 바람이 불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앞에서 언급한 ‘三和’ 노선이다. 셋째, 중국은 경제안보와 군사안보를 병행발전시키는 차원에서 다자주의, 다극화, 양자외교를 확대강화하고 있다. 동북아 지역과 관련해서 보면, 중국이 북핵 6자회담 주관, SCO(상해협력기구)확대강화, CAFTA(중국과 ASEAN의 FTA) 체결, ASEAN+3(한·중·일) 등 분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행사하는 것이 그 구체적인 사례가 하겠다. 넷째, 중국은 對美, 對日 응수전략의 차원에서 수세적 현실주의와 공세적 현실주의 전략을 동시에 구사하고 있다.

2. 미중 간의 건설적 협력의 증대와 북한의 소외

주지하다시피 동북아 지역 내 갈등 현안들이 상존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 동북아 지역 내 핵심국가인 미중 간의 상호공조체제가 강화됨으로서 역내 갈등을 완화하는데 있어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했다는 평가도 가능하다. 특히 북핵문제 해결에서 보여준 미중간의 협력확대는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9·11 테러 이후 중국은 미국과 반테러주의 분야와 한반도 비핵화 등에서 상호 공조관계를 유지해왔다. 이러한 상호이해를 바탕으로 2005년 9월에 미국부부 부장관인 로버트 쥘릭(Robert B. Zoellick)은 미중관

11) Joseph Nye는 국력의 일반적 지표로서 군사력, 정치적 영향력, 경제적 생산성 등을 경성권력(hard power)으로 규정하고, 이 경성권력 이외에 연성권력(soft power)에 속하는 4가지 요소로서 ① 국제적 정통성과 지지를 획득할 수 있는 일련의 가치들(자유, 인권, 민주주의 등); ② 교육적 지적 자산 ③ 문화적 능력과 국제적 위상, ④ 국제기구 등에 있어서 영향력의 정도 등을 제시했다. 결국 어떤 국가의 패권력의 기반 = 강성권력 + 연성권력의 총체적 합. Nye(2000); 문정인(2000, 170-171)

계위원회 회의에서 중국을 ‘책임있는 이익공유자’(a responsible stakeholder)가 되어줄 것을 촉구한 바 있다.¹²⁾ 이어 2006년 2월에 나온 「4개년 국방전략검토보고서」(Quadrennial Defense Review Report: QDR로 약함)와 2006년 3월에 나온 「미국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 NSS로 약함)에서도 미국은 우선 중국의 ‘평화발전의 노선’을 지지하며 ‘경제적 파트너’인 중국과 계속 우호적 관계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중국이 ‘책임있는 이익공유자’로서 평화적으로 변명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¹³⁾

특히 2006년 4월 미국의 대북금융제제에 대한 중국의 수용과 동참, 그리고 2006년 7월 대포동 2호 미사일발사 실험과 10월 9일 북한핵실험 이후 대북제재에서 미중 공조가 크게 부각된 점은 북한으로 하여금 중국에 대한 극도의 불만을 낳은 하나의 계기가 되기도 했다. 중국의 경우 자국 내 ‘북한부담론’이 확산되면서 ‘미중협력’을 위해 ‘북한소외론’이 불가피한 전략적 선택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사실 중국의 실리주의적 입장에서 보면, 자국이 글로벌 대국으로 부상하는 과정에서 미국을 필수적인 건설적 전략 파트너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 가령 중국은 미국으로부터 막대한 무역흑자를 기록하면서 ‘전면적인 소강사회건설’을 앞당기고 있다. 중국은 대미무역흑자가 2004년에 1620억 달러, 2005년에는 2020억 달러에 달할 정도로 막대한 이익을 보고 있으므로 사활적 국가이익인 경제발전을 위해 안정적인 미중관계가 필수적이다.¹⁴⁾

12) Robert B. Zoellick, "Whither China: From Membership to Responsibility?," New York City, September 21, 2005 (<http://www.state.gov/s/d/former/zoellick/rem/53682.htm> (검색일: 2006년 7월 10일))

13) U.S. DoD, Quadrennial Defense Review Report(QDR). <http://www.globalsecurity.org/military/library/policy/dod/qdr-2006-report.pdf>, 2006, p. 29; White House, The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http://www.whitehouse.gov/nsc/nss/2006/nss2006.pdf>, 2006, p. 41.

〈도표 2, 3〉 미국의 무역적자 규모와 대중 무역적자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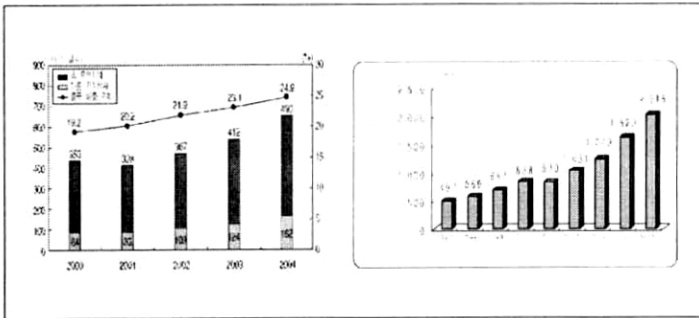


도표 2 출처: 신현수, 민성환, “한·중 수출경합관계로 본 위안화 절상의 영향,” KIET, 2005년 6월호, p. 25; 도표 3 출처: 이승신, “美·中 무역현안과 시사점,” Issue Paper, 06-14,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 2006.4.14

결국 2003년 이후 중국이 ‘6자 회담’을 통한 북핵문제의 해결과정에서 한반도의 비핵화와 다자주의적 접근법에서 미국과 견해의 일치를 보이면서 상당한 공감대를 형성한 점은 무엇보다 중국의 국익에 부합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중재자 역할을 했던 것이다. 게다가 최근 2006년 11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 의원을 장악함에 따라 미중 양국의 건설적 협력관계는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북핵 문제 해결과정에서도 미중 공조는 한층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미중공조는 여전히 중국의 근본적 국가이익 여부에 따라 변화될 수 있는 사안이다.

14) 이승신, “美·中 무역현안과 시사점,” Issue Paper, 06-14,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 2006.4.14

III. 중국의 대북전략과 정책의 기초

1. 2000년대 이후 북중관계의 전개과정

순망치한(唇亡齒寒)과 같았던 북중관계는 술한 우여곡절을 겪으며 혈맹적 우호관계를 유지해왔지만 90년대 초 사회주의권 붕괴와 한중 수교 이후 냉각기를 거쳐 경제적 실리관계로 전환했다. 가령 1993년 이후 북한과의 교역시 중국이 기존의 '구상무역'(barter trade)을 포기하고 경화결제방식으로 전환한 것은 그 단적인 사례이다. 무엇보다 1992년 한중수교 이후 북중관계는 급격히 경색되어 이후 거의 8년간 정상급 방문이 없었다가 2000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중을 계기로 정상급 방문이 재개되었다. 그리하여 2000년 이후 북중관계는 '선린우호관계'를 전환하면서 다시금 관계강화를 모색하고 있다.

〈도표 4〉 90년대 이후 북중관계의 주요일지

- 1990년 9월: 소련과 한국의 국교정상화
- 1991년 9월: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국제사회에 Two Korea 승인됨.
- 1991년 12월: 남북 양측은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남북기본합의서) 서명.
- 1992년 1월: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 1992년 4월: 양상곤 중국 국가주석의 북한 방문
- 1992년 8월: 한중 수교
- 1994년: 김일성 주석 사망
- 1999년: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방중으로 정상급 교류재개
- 2000년 5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중, 양국관계와 개혁개방문제, 남북정상회담 등 논의
- 2001년 1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방중하여 상하이 푸둥 지구시찰, '천지개벽' 발언
- 2001년 9월 장쩌민 국가주석의 북한 답방: 북중관계 '16자 방침' 천명
- 2003년 10월 우병궈(吳邦國) 전인대 상무위원회 위원장 방북.
- 2004년 4월 김정일 방중
- 2005년 북핵 6자 회담에서 9.19 공동성명 발표
- 2005년 10월 후진타오 국가주석 방북: 〈경제기술협조에 관한 협정〉
- 2006년 1월 김정일 방북
- 2006년 7월 대포동 2호 미사일 발사실험
- 2006년 10월 북한의 핵실험 감행

위 <도표4>에서 보듯, 2000년 이후 양국 정상은 상호방문이 크게 늘었다. 중국 정상의 방북을 예로 들면, 2001년 장쩌민 주석은 16자방침(繼承傳統, 面向未來, 睦隣友好, 加強合作: 전통을 계승하고 미래를 향하여 선린우호 속에 협력을 강화한다)을 천명함으로써 양국 관계의 기틀을 새롭게 정립하기도 했다. 2005년 10월 방북한 후진타오 주석도 향후 북중관계 발전의 4원칙을 천명하기도 했다. 4원칙은 첫째, 고위층의 상호방문 전통지속; 둘째, 협력적 내용이 담긴 교류 영역 확대; 셋째, 경제무역 협력을 통한 공동발전의 모색; 넷째, 적극적인 협력을 통한 공동이익의 추구 등이다.¹⁵⁾

한편 북한의 입장에서 90년대 경색되었던 북중관계를 크게 개선할 수 밖에 없었던 나름의 이유와 배경이 있었다. 요컨대 첫째, 중국이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공산당 일당체제를 유지하고 사회주의 국가임을 표방하고 있기 때문이며, 둘째, 북한이 국제무대에서 외교적 지지와 지원을 얻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국가는 중국이기 때문이며; 셋째, 북중 양국이 아직도 한·미·일 3국에 대한 불신과 공동의 안보의식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넷째, 북한은 현재 식량, 원유 등 전략물자의 공급을 중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북중관계의 안정적 유지는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체제생존과 존속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일 수밖에 없었다.¹⁶⁾

2. 중국의 한반도 전략과 대북정책의 기초

우선 후진타오 체제의 한반도 정책기조와 목표들을 살펴보자.

15) 남성욱, “김정일 방중 후 북·중 경제관계의 전망,” 『이슈와 대안』(서울: 미래전략연구원), 2006년 1월 23일, p. 9.

16) 통일부 통일교육연구원, 『북한이해』(서울: 통일부, 2006), pp. 84-85

주지하다시피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의 기초는 주한 중국대사관 홈페이지에 잘 집약되어있다.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는 중국이 한반도 문제를 처리하는 기본 원칙입니다. 중국은 남북쌍방이 한반도 문제의 주요 당사자로서 한반도 문제는 최종적으로 남북쌍방이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해 왔습니다. 기타 관련 각국은 이를 위해 유리한 외부환경을 조성하고 촉진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중국은 남북쌍방의 남북대화, 한반도 긴장완화 추진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한반도의 중국적인 자주평화통일의 실현을 지지하며 앞으로도 이를 위해 계속해서 건설적인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¹⁷⁾ 이러한 중국의 기본입장은 이미 40여년 전 1961년 북중 간에 체결한 〈북중 우호합작상호원조조약〉(中朝友好合作互助条约)의 제 6조에 이미 명기된 바 있다. 즉 “북중 계약 쌍방은 한반도 통일이 반드시 평화적이며 민주주의적인 기초 위에서 실현되어야 하며 그리고 이와 같은 해결이 곧 조선인민의 이익과 극동에서의 평화유지에 부합된다고 인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¹⁸⁾

요컨대 이상의 내용을 통해 중국의 대북 기본정책목표를 2가지로 집약하면 결국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유지’ 및 ‘한반도 남북 양측 간의 대화와 협상을 통한 자주적인 평화통일 실현’이다. 여기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유지는 중국의 이해관계에서 보면 대북전략의 최우선적 목표인 바, 환언하면 북한체제의 존립을 의미하기도 한다.¹⁹⁾ 그런데 2003년 이후 북핵문제가 동북아의 위기사안으로 등장하게 되자, 2003년 1월 10일 장쩌민 국가주석이 부시 대통령과 통화

17) 주한중국대사관, “한반도 문제에 관한 중국의 입장,”

<http://www.chinaemb.or.kr/kor/zhgx/hbdzc/t82943.htm>

18) 박건영 외, 『한반도 평화보고서』(서울: 한울출판사, 2003), p. 218; Scobell(2004, 26).

19) 徐緯地, “朝鮮半島核危機的化解與半島走出冷戰,” 『世界經濟與政治』2003年 第 9期, p. 63; Scobell(2004, 14; 26)

하면서 중국이 북한의 NPT탈퇴를 반대하며, ‘한반도의 비핵화 실현’을 주장했고, 이어 동년 1월 16일 후진타오 신임 총서기도 “중국은 한반도가 핵무기를 보유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단순한 희망사항이 아니라 요구사항으로 강력히 제기했다.²⁰⁾ 따라서 후진타오 체제가 등장한 이후 중국의 대한반도 기본정책은 크게 3가지로 재조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첫째,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유지’; 둘째, ‘남북 양측간의 대화와 협상을 통한 자주적인 평화통일 실현’; 셋째, ‘한반도 비핵화 실현’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런 정책 기조에 따른 구체적인 중국의 대 한반도 외교정책 목표들을 열거하자면, 첫째, 중국의 안정적 경제성장을 위한 요건으로서 한반도 정세의 안정화, 즉 한반도의 돌변사태를 원하지 않는 현상유지를 추구한다는 점이고; 둘째, 한반도 비핵화와 핵도미노 현상을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것; 셋째, 북한상황에 적합한 개혁개방정책 모델을 찾도록 도와서 북한의 연착륙 유도; 넷째, 남북한 양측과 우호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해 한반도 정세안정에 기여; 다섯째, 장기적으로 한반도의 자주적이고 점진적인 평화 통일을 지지함; 여섯째, 한반도의 정전체제를 마감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지하는 것; 일곱째, 통일한국에 대한 미국의 주도권 반대와 중국의 대 한반도 영향력 강화 등이다.²¹⁾

20) Zhu Feng, "China's Policy on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China Strategy, Vol 3, July 20, 2004, p. 5. <http://www.csis.org/isp/csn/040720.pdf> (검색일: 2004년 10월 3일)

21) David Shambaugh, "China and the Korean Peninsula: Playing for the Long Term", *The Washington Quarterly* (Spring 2003), pp. 43-56; 戚保良, "한반도 평화구축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 이태환 편집, 『강대국관계와 한반도 평화구축』, 제10차 세종연구소-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원 학술회의 보고서, 2004년 8월 27일, pp. 39-40; 沈驥如, "维护东北亚安全的当务之急-制止朝鲜核问题上的危险博弈," 『世界经济与政治』(2003年第9期); 김재관, "중국 신지도부의 대한반도 정책의 변화: 대북정책과 남북통일관을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제45집 2호, 2005; International Crisis Group(2006)

3. 중국의 대북전략과 정책 우선순위

중국의 국가이익을 크게 3가지로 분류했을 때, 과연 북한의 위상은 어떠할까? 먼저 중국의 국가이익은 첫째, 중국의 사활적 국가이익(경제발전과 대만문제), 둘째, 중요한 국가이익(지속적 경제발전에 필수적인 것, 북핵문제, 에너지 문제 등), 셋째, 일반적 국가이익(중국의 전통과 가치의 유지) 등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북중관계는 중국의 사활적인 핵심적 국가이익의 종속변수라 할 수 있으며, 최종심급에서 보면 부차적인 지위를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 북한문제가 사활적 국가이익에 위배된다면 언제든지 차후적인 문제로 전환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2003년 이후 제 2차 북핵위기가 재현되면서 동북아 안보상황이 심각한 위기상황에 직면하게 되자 중국의 사활적 국가이익이 침해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이에 따라 중국의 대북전략과 정책은 일정 정도 우선순위가 장단기적으로 달라지게 되었다. 우선 중국의 장기적인 전략적 목표들은 내부적으로 상호관련을 맺으면서 위계적인 성격을 띤다. 열거하면 ① 북한체제의 생존(존속); ② 북한체제의 개혁; ③ 중한 양국 사이의 한층 더 포괄적이고 확고한 관계를 유지 발전시키는 것; ④ 한반도 양국에 대한 중국의 지배적인 외부적 영향력을 확립하는 것; ⑤ 남북한 경제협력과 교류를 통해 통합의 물적 기초를 닦은 후 장기적으로 정치적 통합을 이끄는 것; ⑥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억제 등이다(Shambaugh 2003, 43-56).

이에 반해 중국의 단기적인 대북한 전략목표들은 ① 6자 회담을 통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억제; ② 북한체제의 생존(존속); ③ 북한체제의 개혁으로 분류할 수 있겠다. 결국 중국의 대북 전략·전술의 요소들 또는 위계적 배열은 중국이 한반도와 동북아 문제를 어떤 각도에서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해준다.

이상과 같은 장단기적 대북전략을 토대로 현 후진타오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하위범주 차원의 우선적 정책들을 꼽자면 아래와 같다. 첫째, 한반도의 붕괴로 인한 제반 경제적 비용의 지불회피; 둘째, 통일한국에 대한 미국의 주도권 반대; 셋째, 경제적 취약지역인 중국의 동북3성 진흥개발계획에 북한을 참여시킴으로써 동북3성의 안정화를 확보하는 것; 넷째, 북한에 대한 거래방식의 변화(원조에서 무역과 투자로의 전환)를 통해 쌍무적 관계에서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 다섯째, 북한의 비핵화 실현에 개입함으로써 국내적으로나 동아시아 지역적 차원 더 나아가 대미관계에서 신뢰를 획득하는 것; 여섯째, 중국이 남북한 양국에 대한 영향력행사가 유지되는 한에서 그리고 대만문제를 둘러싼 미중 간의 갈등에서 북한을 워싱턴에 대한 레버리지로 사용할 수 있는 조건 하에서 한반도의 현상유지를 견지한다는 점; 일곱째, 북한 핵보유로 말미암아 일본과 대만의 핵보유로 이어지는 핵도미노 현상을 방지하는 것 등이다(International Crisis Group 2006, i).

IV. 경제안보 영역에서의 북중관계의 변화여부

- 북중경제협력의 강화와 그 해석의 모순성 -

1. 2000년 이후 북중경제교류의 현황과 특징

2000년 이후 북중 간의 경제교류가 급격하게 늘고 있다. 먼저 북중간 경제협력은 기존의 소비재, 서비스업, 광물자원에 이어 최근 해저유전공동개발로까지 확대되어왔다. 도표 5는 2000년 이후 급증하고 있는 북중경제교류의 현황을 나타내고 있다.

〈도표 5〉 북한-중국 경제교역현황 (단위: 100만 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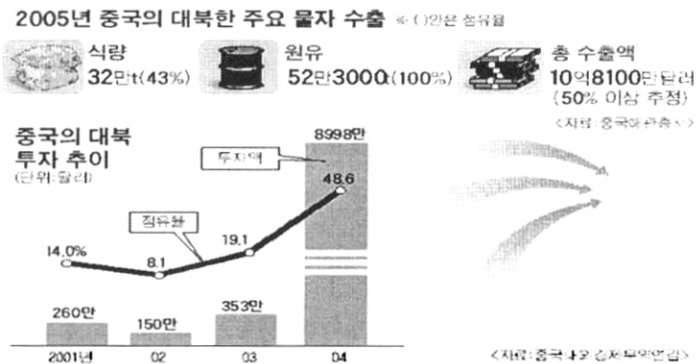
연 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무역액	488 (24.7)	737 (32.5)	738 (32.7)	1,022 (42.8)	1,385 (48.5)	1,580
수 출	37 (6.5)	166 (25.5)	271 (36.9)	395 (50.8)	586 (57.5)	499
수 입	451 (32.1)	571 (35.2)	467 (30.6)	628 (38.9)	800 (43.5)	1081
무역수지	-414 (49.2)	-404 (41.6)	-197 (24.9)	-232 (27.7)	-214 (26.2)	-5,22

주: () 내는 남북교역을 제외한 북한의 전체무역에서 차지하는 중국의 비중임.

자료: KOTRA, 2005년도는 중국해관총서 통계사.

출처: 최수영, “북중 경제교류확대가 남북경협에 미치는 영향과 과제,” 『평화만들기』 평화광장 232호, 2006년 5월 16일

〈그림 1〉 북한의 대중국 의존도 및 중국의 대북투자 추이



출처: 『조선일보』(2006년 10월 14일)

2005년 중국의 대북수출은 10억 8100만 달러로서 전년 대비 35.3%의 증가를 보인 반면, 수입(북한의 대중 수출)은 불과 약 5억 달러에 불과하여 전년 대비 -14.8%의 감소를 보였다. 위 도표 5와 그림 1에서 보듯 북한의 대중 무역의존도는 50%대에 육박하고, 식량 및 원유의존도도 대단히 높음을 알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중국자본의 대북진출이 본격화된 시점은 2004년 봄 이후라고 볼 수 있다. 중국의 원자바오(温家宝) 총리는 2004년 4월 방중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경제협력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중국정부는 중국기업이 북한측과 다양한 형태의 호혜협력을 행할 것을 적극 장려한다'는 의견을 표명함으로써 북중 간의 경제협력이 강화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미 중국정부는 북중경제협력을 정부적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해 2004년 2월에 민·관영 회사인 소위 '베이징차오화요우렌문화교류공사'(北京朝华友联文化交流公司)를 설립하여 대북경제협력사업을 총괄해왔다. 중국의 대북진출은 크게 3가지 차원에서 진행되어왔다. 첫째, 북한 지하자원 및 목재 채굴권; 둘째, 에너지·항만 및 물류 등 사회간접자본의 투자 및 조차권; 셋째, 의류·신발·식품 및 가전제품 등 소비재 상품의 직접 수출 등이다(남성욱, 2006).

북중경협에서 주목할 만한 사항은 중국의 동북3성과 연계되어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즉 최근 들어 중국의 동북3성을 중심으로 중국의 대북 투자가 북한의 광산, 도로, 항만 등을 중심으로 급격히 늘고 있다. 이런 현상은 동북 3성 진흥개발에 따라 필요한 원자재를 확보하기 위한 일련의 진출로 해석된다. 즉 중국의 동북3성 진흥개발 전략의 추진과 '走出去'(해외진출)전략은 <중공중앙 국무원 동북지역 등 노후 공업지역 진흥전략에 관한 몇가지 의견(中共中央国务院关于实施东北地区等老工业基地振兴战略的若干意见)>(中发, 2003년 11号)과 <국무원 판공청, 동북 노후 공업기지의 대외개방의 진일보 확대를 촉진할 것에 관한 실시의견(国务院办公厅关于促进东北老工业基地进一步扩大对外开放的实施意见)>(国办发, 2005년 6월 30日, 第 36号)²²⁾에 잘 나타나고 있다. 이런 '走出去' 전략에 따라

22) 제 36호 문건은 주변국과의 원자재와 에너지 등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확대할 것이

2005년 3월 북중 간에 〈투자촉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체결되었다.

그런데 북한의 대중국 경제교류와 경제적 의존이 확대심화되자 한국 내 김대중 前대통령을 비롯해 일부 보수언론과 보수적 민족주의 세력 및 일부 학자들 사이에서 북한의 ‘동북 4성론화’, ‘위성국가론’이란 담론의 형태로 ‘중국경제론’ 혹은 ‘중국위협론’을 확산시키고 있다.

2. 북중관계의 변화: 대중 신종속이나 아니면 대중편승외교인가?

최근 급격히 늘고 있는 북중간의 교역 및 중국의 대북투자확대를 둘러싸고 상반된 3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우선 ‘동반성장론’적 순수경제적 해석, 즉 중국이 낙후된 동북3성을 개발하는 전략의 일환으로 북한과 경제협력을 강화한다는 순수 경제적 관점이 그 하나이다. 둘째, ‘종속론’에 기초한 정치적 해석, 즉 북한의 ‘위성국가론’ 혹은 ‘동북4성화론’, 중국의 국가적 인수합병(M&A), 신식민지론이 제기되고 있다(남성욱 2006; 홍순직 2006). 이 관점은 일종의 ‘동북공정’의 경제버전이다. 셋째, ‘중국기회론’적 해석으로 북중경협확대를 북한의 대중편승외교의 일환으로 해석하는 시각이다.²³⁾

위 위성국가론의 논리적 근거를 보면, 첫째, 중국자본의 대북진출과 교역확대는 중국정부의 일관된 정치적 의도와 목표, 즉 대북 영향력 확대를 노린 것이다. 둘째, 경제적 실리가 크지 않은 북한에 중국이 대북무역과 투자를 확대하는 것은 북한시장에 대한 선점전략이다. 셋째, 북한이 내수시장을 구축하기 전에 중국제품의 소비지

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36호문건’은 아래 ‘동북4성론’의 논거의 대한 반대사례의 예로 거론될 수 있다. 주장환, “중국의 북한에 대한 경제적 구상: ‘36’호 문건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코리아연구원 27호 2006, www.KNSI.org, pp. 1-6.

23) 위성국가론에 대한 비판적 시각으로 윤덕민, “북한은 중국의 위성국가가 될 것인가”, 미래전략연구원 (2006.3.24) 참고.

로 전략할 가능성이 농후, 즉 북한자체가 자본축적을 통한 생산증가→소비증가→투자증가→자본축적의 선순환 경제발전구조를 갖추지 못하고 소비재의 수입대체→생산중단→자본축적의 실패→재투자 중단의 악순환 구조에 빠져 중국경제에 종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남성욱 2006, 9).²⁴⁾ 넷째, 중국의 고구려사 역사왜곡 작업인 '동북공정'의 경제적 버전이다. 다섯째, 갑작스런 북한붕괴에 대한 사전 대비책으로서 북한에 대한 자본진출을 본격화하여 친미정권 수립을 방지하고 친중국적 한반도로 재편하려는 전략의 일환이다. 이런 위성국가론적 논리에 대해 이희옥 교수는 미래 북한체제의 붕괴 이후 대비책의 일환으로 '동북공정'(the Northeast Project)이 추진되고 있다고 일반화할 수 없으며 오히려 중국은 자국의 경제발전을 유지하기 위해 주변환경의 안정, 즉 '현상유지'(the status quo)를 더 선호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그는 중국정부의 정교한 정치적 의도 속에서 동북공정과 위성국가론이 추진되고 있다는 관점에 대해 비판한다(Lee Heek 2005, 259-260).

반면 중국기회론적 해석은 위 동북4성론(위성국가론)에 대한 비판적 관점의 하나이다. 즉 북한이 중국의 신식민주의화가 되는 것 자체가 오히려 북한의 개혁개방과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는 유리한 환경을 조성한다는 역발상적 관점에서 중국과의 경제의존 확대 및 심화를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 북중 상호의존 확대를 북한이 발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긍정적 관

24) 남성욱 교수와 마찬가지로 현대경제연구원의 홍순직 연구원은 북한의 對中의존도가 심화됨에 따라 중국경제에 예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하고, 특히 중국의 '동북공정' 전략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걸음 더 나아가 홍순직은 '南南北北의 지역 분할 구도'가 발생할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는데, 즉 개성과 금강산 특구 개발은 남측에게, 신의주와 나진·선봉 및 신규 특구 등의 북쪽 지역 개발은 중국을 중심으로 추진한다고 전망한다. 이런 전략적 구도는 남북경협의 범위 축소와 경험을 통한 남북 관계 개선의 지렛대(leverage) 효과가 약화될 것으로 우려된다(홍순직 2006).

점, 즉 '중국기회론'으로 해석이 가능하다(윤덕만 2006). 중국기회론적 관점과 동반성장론적 관점에 따라 동북4성화론을 좀 더 구체적으로 비판하자면, 첫째, 동북4성화론은 이웃국가에 대한 공세적 성격을 반영하므로 후진타오 정부의 외교정책인 '三和'(和平崛起, 和平发展, 和谐世界) 외교노선과 위배된다. 둘째, 북중 간의 교역확대는 낙후된 동북3성의 경제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하고자 했던 중국의 동북3성 진흥개발 계획의 차원에서 제기되었다는 점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주장환 2006). 셋째, 북중교역확대는 북한만의 독특한 현상이 아니라 중국의 '走出去' 전략의 일환이라는 점이다.²⁵⁾ 즉 실제 중국은 북한 외에도 몽골, 미얀마, 베트남, 파키스탄과도 교역을 크게 확대하고 있다. 넷째, 대북한 경제협력을 통해 북한체제의 안정을 확보하여 대미 지렛대의 역할을 높이는 한편 탈북자들의 대량유입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방어전략의 일환으로 제기된 것이다. 다섯째, 중국은 자국의 사활적 국가이익인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 동북아 지역의 안정과 평화가 필수적인 전제이므로 특히 북한체제의 안정과 연착륙은 중국에 유리하다는 판단 하에서 경제적 실익이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대북투자를 늘려왔다는 사실이다. 여섯째, 북한은 중국에 대해 상대적 독자성을 계속 견지하고 있다. 다시 말해 북한은 동북아지역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의 지정학적 역학관계를 활용하여 국익극대화 전략을 구사해왔다. 그러므로 중국의 대북 영향력은 일정 정도 한계가 있다. 가령 북핵실험이나 대포동 2호 미사일 발사는 그 단적인 예이다. 이런 최후의 수단을 활용하여 오히려 중국에 대한 종속을 거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전반적으로 볼 때 북중경협확대 그 자

25) 중국의 '走出去'(해외진출) 전략에 대한 분석으로, 정상은, "중국기업의 走出去 전략 분석," 『중소연구』, 통권 109호 2006년 봄호.

체를 중국보다 오히려 북한이 경제발전을 위해 중국을 활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마치 60-70년대 북한이 중소분쟁의 틈바구니에서 실리를 챙길 수 있었던 것처럼 남한과 중국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균형감있게 챙기고 있다는 쪽으로 해석할 수 없을까? 그리고 이론적으로 보더라도 종속이론은 그 이론적 타당성과 보편성에서 일정 정도 한계가 명확하다는 점에서 더욱이 무엇보다도 ‘우리식 사회주의’와 ‘주체’를 강조하는 북한에게 종속이론을 가지고 ‘위성국가론’을 운운하는 것은 상당히 비현실적인 분석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최근 북중 관계의 발전을 공존공영의 win-win 게임적 각도에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모름지기 북한이 개혁개방의 물꼬를 트는데 중국의 역할과 협조는 대단히 중요하다. 그동안 중국이 북한체제의 붕괴방지와 북한체제의 생존 그리고 연착륙 달성을 위해 기여해온 점을 고려한다면, 중국과의 경제교류 확대는 오히려 북한에게 큰 득이 되리라는 판단도 가능하다. 따라서 북중경협확대 자체를 대중국 신종속론으로 확대해석하는 것은 현상의 한 측면을 과도하게 일반화시킨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북한의 주체적 외교전략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다고도 볼 수 없다.

V. 군사안보영역에서의 북중관계: 북한 핵개발에 따른 북중관계의 변화 여부

1. 북한 핵실험에 대한 중국의 기본태도와 인식

북핵실험 이후 중국은 과연 대북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인식과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일까? 먼저 중국 정부는 북핵문제에 대해

몇 가지로 기본 입장을 집약하고 있다. 첫째, 한반도의 비핵화와 핵 확산 반대; 둘째,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한반도 핵문제의 해결; 셋째,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유지; 넷째, 6자회담을 통한 북핵 문제의 해결 등이다.²⁶⁾

이 같은 중국정부의 원칙적이면서도 공식적인 기본 입장도 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중국 내부의 학자들 사이에서 북한 핵개발에 관한 다양한 의견과 입장들이 개진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주지하듯이 장기간 동안 북한은 미국의 대북봉쇄하에서 ‘상시적 포위심리’(permanent siege mentality)에 빠져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 특히 미국의 對이라크 침공으로 대미 불안감은 한층 더 증폭되어왔다. 이런 가운데 북한 핵 실험의 배경과 동기에 관한 중국의 분석을 보면, 무엇보다 미국 부시행정부의 김정일 정권에게 ‘악의 축’(axis of evil)이나 ‘정권교체’(regime change), 학정의 전초기지(outpost of tyranny) 등과 같은 강경일변도의 대북압박정책을 구사함으로써 북한으로 하여금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촉진시켰다고 보고, 이 점이 바로 북한 핵개발의 주요 동인이자 배경이 되었다고 한다.²⁷⁾ 게다가 미국이 북한의 재래식 전력에 의한 침략을 격퇴하기 위해 핵무기 선제사용권(NFU)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핵개발을 서두르게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실제 핵무기가 탄생한 이래 국제관

26) “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声明,” 2006년 10월 9일, <http://www.fmprc.gov.cn/chn/zxxx/t275346.htm>(검색일: 2006년 10월 16일); “2006년 10월 10일 외교부대변인 류젠차오 기자회견담회 회의 상 답변”(2006년 10월 10일 外交部发言人刘建超在例行记者会上答记者问), <http://www.fmprc.gov.cn/chn/xwfw/fyrth/t275579.htm>(검색일: 2006년 10월 15일)

27) 吴铮, “核武降临朝鲜半岛,” 『财经』2006년 10월 15일, <http://finance.qq.com/a/20061015/000154.htm>(검색일: 2006년 10월 25일); 沈骥如, “中朝关系短期内不会有太大改变,” <http://news.sina.cn/w/2006-10-10/014911192129.shtml>(검색일: 2006년 10월 20일); 李敦球, 2006, “북핵해결을 위한 중국의 역할,” http://csf.kiep.go.kr/nt/forum/forum_view.aspx?seq=47&fm=1(검색일: 2006년 11월 30일)

계에서 핵보유국가에는 군사력을 발동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미국은 북한을 쉽게 공격할 수 없을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하다. 가령 핵무기를 갖지 못한 이라크나 유고연방에 대해서는 주저 없이 미국이 공격을 감행했지만 핵을 보유한 국가에는 공격을 자제해왔다는 사실도 북한 핵개발의 주요 동인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결국 북한 핵개발은 북한의 이해득실에 대한 고도의 판단에서 출발한 것으로 ‘궁극적인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獲得终极安全)이라는 푸판(復旦)대학 셴뎡리(沈丁立)교수의 평가가 설득력 있게 다가온다.²⁸⁾ 그의 발언은 ‘북핵불용론’을 주장해 온 중국정부의 공식적 입장과 상반되는 견해여서 한층 더 주목을 끌었다. 셴뎡리는 핵보유 이후 미국이 북한에 대해 속수무책일 밖에 없는 이유를 크게 5가지로 분석하고 있다. 즉 첫째, 북한의 핵위협; 둘째, 북한의 정규군의 위협; 셋째,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의 반대; 넷째,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 다섯째, 미국 역시 이라크에 대한 과부하(3000여명 미군 사망과 3000억 달러의 비용지출), 이란 핵문제, 레바논 이라크 정세 혼란 등으로 대북 경제책을 쓸 수 없는 형국이기 때문이다(沈丁立 2006).

이 밖에 북한 내부의 경제적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국방비의 절대적 열세 하에서 핵개발이야말로 저비용으로 고효율의 대미 억지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라 할 수 있다. 이 점 역시 북핵개발의 요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²⁹⁾ 다시 말해 북한이 핵보유국가가 되면 북한의 통상적인 군비를 대폭적으로 절감하는 효과와 함께 더 많은 자원을 경제발전에 투입할 수 있게 됨으로써 결국 북한의 처지를 개선하는데 일조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북한의 핵개발은

28) 沈丁立, “朝鮮試驗核武器之考量,” 『青年參考』2006年 9月 5日 http://www.qnck.net.cn/content/2006-09/05/content_1501430.htm(검색일: 2006년 10월 30일)

29) 李敦球(2006); 해리슨 저, 이흥동 외 역, 『셀리그 해리슨의 코리안 엔드게임』(서울: 삼인출판사, 2003), p. 35

북 지도부의 합리적 선택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북한의 핵실험은 북한에게 불리할 것이 없으며, 1998년 인도·파키스탄의 경우처럼 핵실험을 거쳐 핵보유 국가 반열에 진입하는 것이 여러모로 국가안보를 위해 가장 확실한 물질적 담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 인도·파키스탄 두 나라가 핵보유국으로 부상한 이후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이루었다는 점에서 북한 핵보유가 곧 북미간의 관계악화만을 의미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 또한 미국의 핵비확산 정책의 무원칙성·비일관성과 다중성은 북한으로 하여금 핵개발을 더욱 완강하게 추진하게 된 하나의 배경이 되었다고도 볼 수 있다.

〈도표 6〉 인도·파키스탄 핵 보유과정

인도·파키스탄의 핵 보유 과정		
핵실험	국제재제	미국과의 관계
 인도 1974·1998 (75·115기 보유)	-미국 인도 주재 대사 소환, 외국 발에 따른 경제제재 -인도의 상용어사국 위상화의 미군 정통 제재	-아시아에서 중국 경제 격으로 인한 축적 -2001년 9월 카지미르 산 출리 국경 지역의 전쟁 치지 선언 -2006년 5월 무사라프 인도 방문, 인건 폐지할 원로 기금 교부 협정 체결
 파키스탄 1998 (85·99기 보유)	-미국·일본·중국이 무역 제재 인도 -독일·영국·네덜란드·호주 경제제재 동향 -파키스탄 국가정상사태 선포	-미국의 대테러전쟁에 협조 계기로 제재 풀어주어 -2001년 3월 무사라프 대통령, 미 공군 영공 사용 허용 -2006년 3월 파키스탄시 양국 정상회담 개최 -미 국무부 "파키스탄은 핵을 갖는 핵 보유국"

출처: "북 핵폐기 협상 질질 끌며, '핵보유국' 인정 노릴 수도," 『조선일보』 2007년 1월 3일

2. 북핵개발을 둘러싼 북중 간의 마찰과 갈등

이상처럼 북핵실험이 미국의 대북강경책에서 비롯되었다는 분석도 가능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북한의 대중 불만도 핵실험의 한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보는 천치(陳琪) 칭화대학(淸華大學)교수의 분석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는 2006년 4월 중국이 미국의 대북금융제재(방코델타아시아은행: BDA 동결)에 동참하게 되자 북한의 중국에 대한 분노와 불신이 증폭되었고, 향후 중국이 북한의 안전을

완전히 보장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이 형성되었다고 한다. 따라서 2006년 7월 5일 대포동 2호 미사일 발사와 10월 9일 핵실험 이전부터 분출되기 시작한 북중관계의 부분적 균열을 계기로 핵실험이 감행되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³⁰⁾

〈도표 7〉 북한의 미사일 종류

	미사일 종류	사거리(Km)	수 량	시 각	장 소
제 1 발	화성 6호	600-1000	180	3:32 AM	깃대령
제 2 발	노동	1500	200	4:04 AM	무수단리
제 3 발	대포동 6호	3500-6400	?	4:59 AM	깃대령
제 4 발	화성 6호	600-1000	180	7:13 AM	깃대령
제 5 발	노동	1500	200	7:30 AM	깃대령
제 6 발	노동 혹은 신형(?)	1500	200 or ?	8:17 AM	깃대령
제 7 발	노동 혹은 신형(?)	1500	200 or ?	5:22 PM	깃대령

출처: 윤덕민, “북한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평가,” 『주요국제문제분석』 (서울: IFANS, 2006.7.26): <http://missile.index.ne.jp/cgi/misearch.cgi> (검색일: 2006-07-18)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자 중국은 즉각 ‘한란’(悍然: 제멋대로)이란 적대적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북중관계의 균열을 가장 구체적으로 표현하였다. 뿐만 아니라 제 2차 북핵위기 이후 중국 내에 관료들 뿐만 아니라 일부 학자들 사이에서도 북핵 개발에 대해 반대 입장과 동시에 김정일 정권에 대해서도 노골적인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그 단적인 예가 중국 텐진(天津) 사회과학연구원 대외경제연구소의 왕중원(王忠文) 연구원이 ‘전략과 관리(战略与管理)’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세습통치와 先軍정치를 비판했을 뿐만 아니라 북핵문제가 중국에도 위협이 되므로 유엔 안보리에 상정해서라

30) 陈琪, “制裁朝鲜, 是害中国,” <http://www.peacehall.com/news/gb/pubvp/2006/10/200610182341.shtml>(검색일: 2006.11.10); 沈丁立(2006)

도 북핵개발을 저지해야 한다는 매우 이례적인 미국지지의 글을 실어 북중 간에 마찰을 빚은 바 있다.³¹⁾

이에 대해 북한측 역시 중국에 대해 불만을 갖기는 마찬가지이다. 북한측의 대중 불만은 중국이 북한보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측과의 협력에 더 치중하고 있다고 점이다. 게다가 그동안 북한과 전통적인 우호협력 관계유지에서 핵심적 역할을 해왔던 중국공산당의 대외 연락부의 역할이 대폭 축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공산당 이념에 가장 충실해야 할 이 부서마저도 미국이나 심지어 한국과의 관계 확대에 더 매진하고 있다고 북한측은 파악하고 있다(International Crisis Group 2006, 16). 최근 들어 무엇보다 북한이 후진타오 정부에 불만을 가지게 된 계기는 미국의 대북한 대량살상무기개발 억지정책, 특히 북한의 비핵화 방면에서 후진타오 정부가 적극적인 대북압박과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가(*quid pro quo*)로 미국으로부터 대만문제 해결에 지지를 요구하는 미중 간에 모종의 '빅딜'(북한의 희생을 대가로 대만을 얻는)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³²⁾ 이런 '빅딜' 역시 중국이 사활적 국가이익인 대만통일을 우선에 두고 북핵문제를 처리하고 있는 구체적인 한 사례라는 점에서 북한의 대중(對中) 불만을 고조시킨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3. 군사안보적 차원에서 북중관계는 과연 근본적인 변화를 하고 있는가?

필자가 보기에 우선 북중안보관계의 변화 여부를 가늠하는 가장

31) 王忠文, "从新的角度密切关注朝鲜问题与东北亚局势," 『战略与管理』, 2004年 第4期. 김정일 정권에 대한 신랄한 비난 때문에 결국 본 잡지는 몰수 정간되었다.

32) 田晓明, "中国该如何因应朝鲜半岛的变化2," <http://www.ncn.org/asp/zwginfo/da.asp?ID=65321&ad=8/12/2005>(검색일: 2006년 10월 12일); International Crisis Group (2006, 17-18)

중요한 척도는 바로 1961년 북중 간에 체결한 〈북중 우호합작상호원조조약〉(中朝友好合作互助条约)의 수정 내지 폐기 여부이다. 군사동맹성격을 지닌 동 조약의 제 2조는 쌍방간에 어느 한쪽이 침략을 받게 되면 한쪽은 즉각 군사원조를 해야 한다는 자동개입내용이 명기되어 있다.³³⁾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동 조약의 '자동개입' 조항 때문에 전쟁억지력의 긍정적 역할도 해왔지만, 다른 한편으로 대북 압박에서 실효성을 발휘할 수 없었다는 부정적 측면도 공존하고 있다. 때문에 중국 내에서 대북 견제용 레버리지를 갖기 위해 위 북중 조약을 수정 혹은 파기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는 학자들이 늘고 있다(沈驥如 2003, 5; 吴铮 2006). 그 가운데 가령 선지루(沈驥如)는 조약파기의 이유로 첫째, 중국은 '신안보개념'(new concept of security)에 따라 '군사동맹'을 포기했고, 둘째, 중국이 북한의 핵개발에 찬성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이미 표명했으며, 셋째, 핵문제로 북미 간 전쟁이 발발하더라도 대북 지원 군대 파견은 무리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沈驥如 2003, 5). 북중 간에 자동개입조항에 관한 재협상 논의가 2003년에 제기되었지만 북측은 시기가 적절치 않다고 거부했다고 한다. 이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방중 했을 때, 중국 측에 더 많은 군사적 지원과 함께 미국의 MD(미사일 방어)에 맞설 수 있는 대응기술체계의 이전을 요구했지만 중국측 역시 이 요구를 거부했다고 한다(International Crisis Group 2006, 17). 이처럼 북중 간에 군사협력은 예상만큼 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핵실험 전후로 자동개입조항의 수정·폐기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중국정부는 공식적으로 동 조약의 변경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³⁴⁾

33) 이종석, 『북한-중국관계 1945~2000』(서울: 중심출판사, 2000), p. 319; 박건영 외 (2003, 217-218)

34) "2006년 10월 10일 외교부대변인 류젠차오 기자간담회 회의 상 답변"(2006年 10月 10日外交部发言人刘建超在例行记者会上答记者问), <http://www.fmprc.gov.cn/>

따라서 아직까지 북중관계는 근본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지 않다고 추론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중국은 자국의 사활적인 국가이익을 유지하기 위해 북한의 안정과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비록 북핵문제를 둘러싸고 미중 간에 '빅딜'(북한-대만)이 비공식적으로 거론되었다고 하지만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가 중국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대북군사제재를 결의할 수 없었던 것이다.

한편으로 북한의 안정이란 각도에서 볼 때, 중국이 대북제재의 수위에 신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보다 우선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가 북한체제의 붕괴로 이어져서는 안된다는 점; 둘째, 북한은 여전히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 '완충지대'로서의 전략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점; 셋째, 중국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주도해왔던 6자회담을 수포로 돌리지 않고 향후 동북아의 다자간 안보협의기구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구상 등이 있었기 때문에 대북 군사제재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반대했던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북한의 협력이란 각도에서 보면, 중국의 사활적인 핵심적인 국가이익은 경제발전과 대만과의 통일인데, 북한이 주한미군을 견제하고 있기 때문에 대만독립으로 말미암아 미중 간에 군사적 대립이 불가피할 경우, 북한이 중국을 위하여 전략적 방어벽 역할을 하면서 중국과 협조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이런 관점은 대표적으로 중국 런민대학(人民大学)의 스인홍(时殷弘) 교수가 취하고 있는바, 그는 기본적으로 중국이 남북한 양국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한에서 '두 개의 한국'이란 '현상유지' 정책이 필요하며, 나아가 만약에 미중 간 혹은 중일 간의 관계가 악화되었을 경우 중국에게 있어 북한의 존립과 유지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런 맥락에서 중국이 북한에 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북중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한다(International Crisis Group 2006, 13). 따라서 북한이 중국의 국가안전에 공헌하고 있으므로 중국은 북한을 포기할 수 없으며 핵실험을 했다고 해서 북한에 대해 진정으로 제재를 가하기가 불가능한 입장이었다고 보여진다. 그래서 실제로 핵실험 이후 중국은 북한에 대해 치명적인 제재를 가하지 않았고 오히려 북한체제의 유지에 기여했다. 이상과 같은 이유들 때문에 군사안보적 차원에서 북중관계는 아직 근본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다.

4. 북핵문제에서 중국이 직면한 딜레마

북핵문제에서 중국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딜레마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 대북압박을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북한에 대해 '전략적 부담'(strategic liability)을 느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북 영향력에도 일정 정도 한계가 있다는 사실이다(Scobell 2004). 대북 영향력의 한계를 나타내는 그 단적인 예가 중국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북한측이 2003년 NPT에 탈퇴했을 뿐만 아니라 2005년 2월 10일에는 핵보유 선언을 했으며, 2006년 7월 대포동 2호 발사에 이어 마침내 10월에 핵실험 강행했다는 점이다. 사실 논리적으로 보면 북한이 자국의 근본적 국가이익에 출발해서 핵개발하는 것에 대해 중국은 기본적으로 반대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셴펑리(沈丁立)는 주장한다. 왜냐하면 중국도 1960년대에 미국의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핵개발의 경로를 북한처럼 밟았기 때문이다(沈丁立 2006). 왜 중국에게 핵개발은 정당화될 수 있는 반면, 북한에게 핵 개발은 용납될 수 없는가? 또한

중국이 북핵불용론으로 대북압박을 행사하는 것은 중국이 국제관계에서 그토록 강조해왔던 일종의 내정불간섭 원칙을 스스로 위배하는 꼴이 된다. 다시 말해 양국 사이에 주권침해의 논란이 야기된다는 점이다.³⁵⁾ 따라서 중국은 북한이 자국의 근본적 안보이익에서 출발하여 핵보유국가로 전환하는 것을 묵과할 수밖에 없는 딜레마에 처하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익명을 요구한 한 중국의 학자에 따르면, 최근 중국 내에서 개최된 중국의 북한문제 전문가 토론회에서 중국이 비록 공식적으로 한반도비핵화(북핵불용론)를 주장해왔다 할지라도 북한 핵실험 이후 북한을 이제 ‘핵보유국가’로 인정하는 편이 현실적인 판단이다라고 보는 쪽이 3:1 비율로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즉 비록 중국 내 일부 학자들의 의견이긴 하지만 북한을 핵보유국가로 기정사실화하자는 분위기가 중국 내에서 서서히 대두하고 있다. 이 점 역시 중국의 북핵 정책에서 비핵화란 원칙적 입장과 실제 사이의 불일치와 딜레마를 표현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북한의 핵개발은 동북아 지역의 핵도미노 현상을 유발할 것으로 전망하고 중국정부나 일부 학자들은 핵개발 확산현상을 우려하였다(沈驥如 2003; 沈驥如 2006; 李敦球 2006). 과연 그럴까? 그런데 실제로 그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는 중국학자들도 있다(沈丁立 2006). 왜냐하면 무엇보다 미국이 한국과 일본 그리고 대만의 핵개발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이들 국가들의 핵개발 자체는 한·미·일 동맹체제로부터 이탈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북한이 핵보유 국가로 전환하는 것 자체가 북중 간의 분열을 확대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중국이 북한을 더욱 더 포용할 수 밖에 없는 피동적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35) 이런 선명리의 북한옹호적 관점에 대해 북경대 국제관계학원 주펑(朱鋒)교수는 이런 관점은 냉전적 시기의 관점으로서 탈냉전적 시기에는 부적절한 관점일 뿐만 아니라 부정확한 관점이기도 하다고 비판한다. 필자와의 북경 인터뷰(2007. 2. 5) 중에서.

보았을 때, 북중 관계의 근본적인 균열은 아직 시기상조인 것 같다.

VI. 맺음말

이상에서 북핵개발을 전후로 하여 최근 북중관계의 변화를 경제 안보 차원과 군사안보 차원으로 나눠 살펴보았다. 과연 북중관계는 근본적인 변화를 하고 있는가? 어떤 근거와 바로미터를 통해 판단할 것인가?

먼저 북중관계가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보는 쪽은 아래와 같은 나름의 근거를 제기할 수 있다. 첫째, 중국정부의 공식적인 대북적대 표현(悍然)과 동시에 비공식적 차원에서 김정일 정권에 대한 중국 내 불만의 확대; 둘째, 미국의 대북금융제재에 대한 중국의 동참; 셋째, 북한과의 관계가 소원해질지라도 미국과의 관계 안정화를 선호하는 중국의 대미 중시외교, 즉 미중관계의 안정화를 중국의 교외 핵심으로 삼는 중국 지도부의 전략적 판단과 미중관계를 '책임 있는 이익공유자' 관계로 발전시키려는 전략적 판단의 확산; 넷째, 중국 내 북한에 대한 '전략적 부담론'의 부상; 다섯째, 1961년 '북중 우호협력상호원조조약(中朝友好合作互助条约)'의 수정 및 파기 여론의 확산; 여섯째, 비공개적 차원에서 미중 간의 북한-대만의 '빅딜' 논의 파문; 일곱째, '동북공정'을 통한 고구려사 역사왜곡과 북중경협확대를 통해 북한을 중국의 '동북4성'이나 '위성국가'로 흡수통합시키려는 전략의 부상 등을 꼽을 수 있다.

이에 반해 필자는 여전히 북중관계는 단기적인 갈등이 있을지라도 근본적으로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보는 안정화론이 한층 더 큰 설득력과 현실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

한다. 그 근거를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중국의 장기적인 국가 발전전략의 사활적 핵심요소인 경제발전과 대만통일을 위해 북한과의 협력과 안정적 관계 유지는 필수적이기 때문; 둘째, 중국의 대북외교에서 북한체제의 안정과 존립 그리고 친중적 관계 유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 셋째, 한반도 평화와 안정 그리고 현상유지가 중국의 국익에 필수적이라는 점; 넷째,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기정사실화할 경우 북한을 통한 미국의 견제 가능성, 즉 '以夷制夷'(以朝制美)의 가능성과 함께 '완충지대'로서 북한의 대미견제 역할의 중요성 증대; 다섯째, 북한 핵실험 이후 중국이 UN의 경제제재에만 찬성함으로써 실제로 북한에 치명적인 위해(危害)를 가하지 않은 점, 좀 더 구체적으로 중국은 북중 간 경제교역을 유지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에너지·식량 지원을 중단하지 않았다는 사실; 여섯째, 중국 내 북한 핵실험의 불가피성 거론과 함께 북한을 핵보유국가로 기정사실화하자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점; 일곱째, 중국 내 감정적 대북대응조치에 대한 반발과 비판 여론의 득세(陈琪 2006); 여덟째, 북중경제협력의 강화를 통한 북중 간 '동반성장론'과 '중국기회론'의 확산; 아홉째, 비록 학계와 비공식 라인을 통해 61년 북중안보조약의 파기 내지 수정 여론이 거론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중국정부가 공식적으로 동 조약의 수정 혹은 폐기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바로 이 자동개입 조항의 존폐 여부는 북중관계의 변화 여부를 기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바로미터라는 점에서, 동 조항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북중관계가 여전히 안정적 관계를 유지해나가고 있음을 단적으로 입증하는 가장 구체적인 사례가 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상의 논거에 비추어 볼 때, 제2차 북핵위기 이후 북중관계는 부분적인 갈등의 소지는 있었지만, 근본적인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판단되며, 최근의 북핵실험 자체도 북중관계를 근본적으로 교란시키는 동인이 될 수 없다고 조심스럽게 추론할 수 있겠다.

참고문헌

- 고유환, 전현준 외. 2006, 『10·9 한반도와 핵』(서울: 이룸출판사)
- 김재관. 2005, “중국 신지도부의 대한반도 정책의 변화: 대북정책과 남북통일관을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제 45집 2호
- 남성욱. 2006, “김정일 방중 후 북·중 경제관계의 전망,” 『이슈와 대안』(서울: 미래전략연구원), 1월 23일
- 리둔치우(李敦球). 2006, “북핵해결을 위한 중국의 역할,”
http://csf.kiep.go.kr/nt/forum/forum_view.aspx?seq=47&fm=1
- 문정인. 2000, “미국의 패권과 21세기 전략”, 오기평 편저, 『21세기 미국 패권과 국제질서』, (서울: 오름 출판사)
- 박건영 외. 2003, 『한반도 평화보고서』(서울: 한울출판사, 2003)
- 윤덕민. 2006, “북한은 중국의 위성국가가 될 것인가”, 미래전략연구원 (2006.3.24)
- 이승신. 2006, “美·中 무역현안과 시사점,” Issue Paper, 06-14,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 2006.4.14
- 이종석. 2000, 『북한-중국관계 1945~2000』(서울: 중심출판사, 2000)
- 통일부 통일교육연구원. 2006, 『북한이해』(서울: 통일부, 2006)
- 정상은. 2006, “중국기업의 走出去 전략분석,” 『중소연구』, 통권 109호 2006년 봄호.
- 주장환. 2006, “중국의 북한에 대한 경제적 구상: ‘36’호 문건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코리아연구원 27호. www.KNSI.org.
- 최수영. 2006, “북중 경제교류확대가 남북경협에 미치는 영향과 과제,” 『평화만들기』232호, 2006년 5월 16일
- 해리슨 저, 이흥동 외 역. 2003, 『셀리그 해리슨의 코리안 앤드게임』(서울: 삼인출판사)
- 홍순직. 2006, “북한의 ‘南南北北’ 개발전략의 가시화,” 현대경제연구원, 2006년 2월 6일 http://www.hri.co.kr/research/publication_1_sub.asp?CODE=10626&CATE_CODE=1.2&tabl_type=A&grpID=
- Baker, Richard W. 2006, “Asia Pacific Security Survey 2006,” East-West Center,
<http://www.eastwestcenter.org/stored/pdfs/APSS2006Report.pdf>

- Central Intelligence Agency, The World Factbook 2005, updated March 29, 2006(<http://www.cia.gov/cia/publications/factbook/rankorder/2001rank.html>) (April 11, 2006)
- International Crisis Group, 2006, "China and North Korea: Comrades forever?" International Crisis Group Asia Report No. 112 - 1 Feb.
- Lee heeok, 2005, "China's Northeast Project and South Korean- Chinese relationship," Korea Journal, Summer.
- Nye, Joseph, 2000, "The Power We must squander," The New York Times (Jan.3. 2000)
- Office of the Secretary of Defense, 2005, "Annual Report to Congress: The Military Power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05," <http://www.dod.mil/news/Jul2005/d20050719china.pdf>
- Office of the Secretary of Defense, 2006, "Annual Report to Congress: The Military Power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http://www.dod.mil/pubs/pdfs/China%20Report%202006.pdf>
- Scobell, Andrew. 2004, "China and North Korea: From Comrades-in-arms to Allies at arm's length," Strategic Studies Institute of the U.S. Army War College, March 2004, <http://www.strategicstudiesinstitute.army.mil/pubs/display.cfm?ubID=373>
- Shambaugh, David, 2003, "China and the Korean Peninsula: Playing for the Long Term," The Washington Quarterly (Spring)
- Tkacik, Jr, John J. 2006, "Hedging Against China," Heritage Foundation Background, No. 1925, April 17
- U.S. DoD. 2006, Quadrennial Defense Review Report(QDR). <http://www.globalsecurity.org/military/library/policy/dod/qdr-2006-report.pdf>
- White House. 2006, The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http://www.whitehouse.gov/nsc/nss/2006/nss2006.pdf>
- You Ji. 2004, "Understanding China's North Korea Policy," China Brief, Volume IV, Issue 5, March 3
- Zoellick, Robert B. 2005, "Whither China: From Membership to Responsibility?," New York City, September 21, 2005(<http://>

- www.state.gov/s/d/former/zoellick/rem/53682.htm(검색일: 2006. 7. 10)
- Zhu Feng. 2004, "China's Policy on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China Strategy, Vol 3. July 20, 2004.
- 陈琪, "制裁朝鲜, 是害中国,"
http://www.peacehall.com/news/gb/pubvp/2006/10/200610182341.shtml(검색일: 2006.11.10)
- 江泽民. 2002, "全面建设小康社会, 开创中国特色社会主义事业新局面," 11月8日.
- 戚保良, 2004, "한반도 평화구축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 이태환 편집, 『강대국관계와 한반도 평화구축』, 제 10차 세종연구소-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원 학술회의 보고서, 8월 27일.
- 萨本望. 2004, "推进亚太多边安全合作的机遇与挑战," 『和平与发展』第1期.
- 沈丁立. 2006, "朝鲜试验核武器之考量," 『青年参考』2006年 9月 5日
http://www.qnck.net.cn/content/2006-09/05/content_1501430.htm(검색일: 2006년 10월 30일)
- 『中华人民共和国条约集 第 10 集』, 北京: 法律出版社, 1962年版.
- 沈骥如. 2003, "维护东北亚安全的当务之急-制止朝核问题上的危险博弈," 『世界经济与政治』(2003年 第 9期)
- 沈骥如. 2006, "中朝关系短期内不会有太大改变,"
http://news.sina.cn/w/2006-10-10/014911192129.shtml(검색일: 2006년 10월 20일)
- 田晓明. 2005, "中国该如何因应朝鲜半岛的变化?,"
http://www.ncn.org/asp/zwginfo/da.asp?ID=65321&ad=8/12/2005(검색일: 2006년 10월 12일)
- 温家宝. 2003, "中国的发展和亚洲的振兴," 10月 7日
- 葉自成. 2000, "中國實行大國外交戰略勢在必行-關於中國外交戰略的幾點思考," 『世界經濟與政治』, 1期
- 葉自成. 2003, 『中国大战略: 中国成为世界大国的主要问题与战略选择』(北京: 中国社会科学出版社)
- 乔良, 王湘穗. 2005, 『超限战: Unrestricted Warfare』(北京: 中国社会

出版社)

王义桅, 2005, “从和平崛起到和谐世界: 胡锦涛外交战略的变迁-兼谈中美如何和谐相处?,” 12월, 현대중국학회 발표논문.

徐纬地, 2003, “朝鲜半岛核危机的化解与半岛走出冷战,” 『世界經濟与政治』2003年 第 9期.

国务院新闻办公室, 2005, “中国的和平发展道路,”

http://www.gov.cn/zwgk/2005-06/02/content_3618.htm

“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声明,” 2006年 10月 9日,

<http://www.fmprc.gov.cn/chn/zxxx/t275346.htm>(검색일: 2006년 10월 16일)

〈中共中央国务院关于实施东北地区等老工业基地振兴战略的若干意见〉(中发, 2003年 11号)

〈国务院办公厅关于促进东北老工业基地进一步扩大对外开放的实施意见〉(国办发, 2005年 6月30日, 第 36号)

吴铮, 2006, “核武降临朝鲜半岛,” 『财经』2006年 10月 15日, <http://finance.qq.com/a/20061015/000154.htm>(검색일: 2006년 10월 25일)

“2006년 10월 10일 외교부대변인 류젠차오 기자간담회 회의 상 답변”(2006년 10월 10일 외교부发言人刘建超在例行记者会上答记者问),

<http://www.fmprc.gov.cn/chn/xwfw/fyrth/t275579.htm>(검색일: 2006년 10월 15일)

ABSTRACT

Research on fundamental Changes of Sino-North Korean relations in the economic and military sphere since 2003(the second round of North Korea's Nuclear Crisis)

KIM Jaekwan

Professor,
Dept. of Political Science and International Relation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This article explores what has happened in the economic and the military sphere between China and North Korea since 2003(the second round of North Korea's Nuclear Crisis and developing its Nuclear weapon). Recently although there have been some difficulties and conflicts in the realms of economic and military security between two countries, this paper basically suggests that Sino-North Korean relations have not yet brought about fundamental changes in the two spheres. At the same time it underscores they have been firmly keeping stable relationship, in spite of North Korea have become a strategic liabilities for Beijing since 2003, especially North Korea's Nuclear crisis. This argument is based on a series of critical grounds. There are some logical grounds. First of all, Beijing's top priority is Pyongyang's survival, that is to say, China's bottom line is stability and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So China do not impose lethal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but decide to help North Korea to survive through a lot of economic support. Secondly, China prefers strategic buffer zone to strategic liabilities for herself regarding North Korea's strategic values. Thirdly, because China do

not want abrupt collapse of North Korea, so Preference for the two-Korea status quo, so long as China can sustain influence in both, is evident. Fourthly, China is still officially maintaining "The Treaty of Friendship and Cooperation and Mutual Assistance Betwee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nd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s a treaty of alliance in 1961. Fifthly, Judging from recent interviews with Chinese analysts concerning North Korea, most of whom are affiliated with Chinese government think tanks, China would be reluctantly able to live with a nuclear North Korea after nuclear test, although China officially maintains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Key Words: Sino-North Korean Relation, North Korea's Nuclear Crisis, buffer zone school, strategic liability school, China threat theory, China Opportunity theory